



발행처 • 대전발전재단연구원 | 발행일 2014. 3. 1  
발행인 • 대전발전재단연구원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85(선화동 287-2)  
홈페이지 • www.djdi.re.kr  
전화 • 042-530-3534 | 팩스 • 042-530-3528  
제작 • (주)인커뮤케이션즈

CONTENTS 사회적자본에 대한 인지도 분석 > 연구원 행사소식 > 경제동향

## 〇〇 사회적자본에 대한 인지도 분석 〇〇

최길수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I. 조사의 개요

본 조사는 대전시민들의 사회적자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7월이며, 대전광역시 5개구(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총 722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전체 응답자 722명중 남성은 362명(50.1%), 여성은 360명(49.9%)이고, 20대 142명(19.7%), 30대 156명(21.6%), 40대 167명(23.1%), 50대 139명(19.3%), 60대 111명(15.4%), 70대 7명(1%)의 분포를 보인다. 응답자의 학력은 중졸 이하 46명(6.4%), 고졸 278명(38.5%),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교졸 365명(50.6%), 대학원졸 33명(4.6%)으로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직업별로 보면, 농업임업 5명(0.7%), 자영업 148명(20.5%), 판매 및 서비스업 95명(13.2%), 기능 및 숙련공 10명(1.4%), 일반직업직 20명(2.8%), 사무 및 기술직 155명(21.5%), 경영 및 관리직 18명(2.5%), 전문직 61명(8.4%), 가정주부 110명(15.2%), 학생 58명(8.0%), 은퇴 및 퇴직자 14명(1.9%), 무직 24명(3.3%), 기타 4명(0.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거주지로는 서구지역 거주자가 225명(31.2%)으로 가장 많은 참여를 했고 그 외 지역 즉, 동구 117명(16.2%), 중구 131명(18.1%), 유성구 143명(19.8%), 대덕구 106명(14.7%)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주거형태 대전시 거주기간, 주택소유형태에 관한 사항을 보면,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400만원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394명(54.6%)으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상당부분은 아파트에 거주(63.4%) 하고 있고, 20년 이상 거주자(50.4%)이며, 자가 주택(75.9%)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 사회적자본 인지도 조사결과

#### 01 전반적 사회적자본 인지도 여부

사회적자본에 대한 기존의 인지도를 확인하기 위해 처음에는 사회적자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사회적자본 인지도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전시의 사회적자본 확충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76.7%가 “모른다”라고 응답하였고, 23.3%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자본 사업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전광역시의 사회적자본 확충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한 경로에 대한 응답을 분석해 본 결과, 방송(41.1%), 신문(24.4%),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12.5%)의 경로를 통해 사회적 자본 확충사업에 대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1.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인지도 단위: 명, %

항목	빈도	분포
알고있다	168	23.3
모른다	554	76.7
합계	722	100.0

→ 표2. 사회적 자본 인지경로 단위: 명, %

항목	빈도	분포
신문	41	24.4
방송	69	41.1
포스터	3	1.8
현수막	4	2.4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21	12.5
친구 및 동료	8	4.8
교육훈련기관	11	6.5
트위터 등 SNS	11	6.5
합계	168	100.0

## 02 사회적본 구성요소에 대한 인지도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형태가 없는 자본'이라는 사회적자본의 정의를 설명한 후, 대전지역에서 사회적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에 대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역 네트워크 확대(27.7%), 자발적 참여의 확대(27.7%), 신뢰증진(26.3%), 사회적 규범의 확립(18.0%) 등이라고 대답했다.

사회적자본 구성요소 중 전반적인 신뢰의 증진을 위해 어떤 영역의 신뢰를 증진시켜야 하는가에 대하여 시민들은 공공기관의 신뢰(51.0%)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개인수준의 신뢰(17.2%), 의사전달매체의 신뢰(16.2%), 사회단체의 신뢰(15.7%)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표3.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중요요인 단위: 명, %

항목	빈도	분포
신뢰증진	90	26.3
사회적 규범 확립	130	18.0
지역네트워크확대	200	27.7
자발적 참여확대	200	27.7
기타	2	0.3
합계	722	100.0

→ 표4. 전반적 신뢰증진을 위한 영역별 신뢰 중요영역 단위: 명, %

항목	빈도	분포
개인수준	124	17.2
공공기관	368	51.0
사회단체	113	15.7
의사전달매체	117	16.2
합계	722	100.0

개인적 차원의 신뢰 중, 가장 우선적으로 증진시켜야 할 신뢰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웃간의 신뢰(40.2%)와 가족간의 신뢰(25.1%)가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각종 모임 구성원들과의 신뢰(14.0%), 직장동료간 신뢰(12.3%)로 나타났고, 친구(4.4%)와 친족(4.0%)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공공제도 및 기관 신뢰에 있어 가장 먼저 증진시켜야 할 신뢰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응답한 과반수 이상의 시민들이 시청(33.5%)와 시의회(18.7%)를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또는 제도의 신뢰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구청(9.8%), 지방경찰청(9.3%), 지방교육청(9.3%), 구의회(6.9%), 동사무소(6.9%), 지방법원(5.5%)의 순서로 답하였다.

➔ 표5. 개인적 차원의 신뢰 증진을 위한 중요 영역 단위: 명, %

항목	빈도	분포
신뢰증진	90	26.3
사회적 규범 확립	130	18.0
지역네트워크확대	200	27.7
자발적 참여확대	200	27.7
기타	2	0.3
합계	722	100.0

➔ 표6. 공공기관 및 제도 신뢰 증진을 위한 중요 영역 단위: 명, %

항목	빈도	분포
시청	242	33.5
시의회	135	18.7
구청	71	9.8
구의회	50	6.9
동사무소	50	6.9
지방경찰청	67	9.3
지방법원	40	5.5
지방교육청	67	9.3
합계	722	100.0

공공기관 종사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증진시켜야 할 신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47.4%)가 거의 응답자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그 뒤로 지방의원(17.9%), 교육공무원(13.3%), 경찰공무원(13.2%)가 차지했고, 법원공무원(4.3%)과 지방공기업직원(4.0%)은 적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다.

사회기관 신뢰 중 가장 우선적으로 증진시켜야 할 영역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언론기관의 신뢰(34.5%)와 시민단체의 신뢰(27.7%)가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지역기업(15.7%), 노동조합(9.4%), 각급학교(6.8%), 종교단체(6.0%)의 순서대로 응답하였다.

➔ 표7. 공공기관 종사자 신뢰 증진을 위한 중요 영역 단위: 명, %

항목	빈도	분포
지방자치단체공무원	342	47.4
지방의원	129	17.9
경찰공무원	95	13.2
법원공무원	31	4.3
교육공무원	96	13.3
지방공기업직원	29	4.0
합계	722	100.0

➔ 표8. 사회기관 신뢰 증진을 위한 중요영역 단위: 명, %

항목	빈도	분포
종교단체	43	6.0
노동조합	68	9.4
지역기업	113	15.7
각급 학교	49	6.8
시민단체	200	27.7
언론기관	249	34.5
합계	722	100.0

의사전달매체 신뢰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증진시켜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응답자 대다수는 TV 및 방송매체의 신뢰(61.5%), 인터넷 매체(22.0%), 신문 및 잡지(10.8%)가 중요한 영역으로 선택하였다. 그 외에 대면접촉(3.9%), 전단지 및 포스터(1.8%)를 응답하였다.

전반적인 사회적 규범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근절(39.8%), 시민의식함양(32.1%), 공공질서확립(28.1%)의 순으로 응답함으로써 부정부패근절이 시민의식함양과 공공질서 확립보다 대전광역시 사회적 규범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전광역시 시민들은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 표9. 의사전달매체 신뢰 증진을 위한 중요영역 단위: 명, %

항목	빈도	분포
TV 및 방송	444	61.5
신문 및 잡지	78	10.8
인터넷매체	159	22.0
전단지 및 포스터	13	1.8
대면접촉	28	3.9
합계	722	100.0

➔ 표10. 사회적 규범 향상 중요 요인 단위: 명, %

항목	빈도	분포
공공질서 확립	203	28.1
시민의식 함양	232	32.1
부정부패 근절	287	39.8
합계	722	100.0

사회적 규범 형성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가정교육(27.1%), 공익캠페인(24.7%), 시민교육(24.4%), 학교교육(23.4%) 순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의식함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가장 먼저 근절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36.1%)을 가장 먼저 근절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음으로 뇌물수수(26.9%)와 탈세(23.3%)라고 응답했고 교통법규 위반(13.7%)이 가장 적은 응답을 했다.

→ 표11.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방법의 중요도 단위: 명, %

항목	빈도	분포
가정교육	196	27.1
학교교육	169	23.4
시민교육	176	24.4
공익적 캠페인	178	24.7
기타	3	0.4
합계	722	100.0

→ 표12.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중요 요인 단위: 명, %

항목	빈도	분포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261	36.1
교통법규 위반	99	13.7
탈세	168	23.3
뇌물수수	194	26.9
합계	722	100.0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청렴해야 할 대상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치인(60%)로 가장 많은 응답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공무원(23.5%)이 차지했다. 그 외 언론인(5.0%), 교육자(4.6%), 일반시민(4.2%), 기업인(2.8%)의 순서로 조사됐다.

준법의를 증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대전시민들은 법집행의 공정성(35.6%)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법집행의 투명성(19.7%), 법집행의 일관성(13.9%), 법집행의 엄격성(10.9%), 법집행기관 공직자의 신뢰(10.2%), 법집행기관의 신뢰(9.7%)의 순서로 응답했다.

→ 표13. 부정부패근절을 위한 중요 대상 단위: 명, %

항목	빈도	분포
일반시민	30	4.2
정치인	433	60.0
공무원	170	23.5
기업인	20	2.8
교육자	33	4.6
언론인	36	5.0
합계	722	100.0

→ 표14. 준법의식 증진을 위한 중요 요인 단위: 명, %

항목	빈도	분포
법집행의 공정성	257	35.6
법집행의 일관성	100	13.9
법집행의 엄격성	79	10.9
법집행의 투명성	142	19.7
법집행기관의 신뢰	70	9.7
법집행기관 공직자의 신뢰	74	10.2
합계	722	100.0

지역네트워크에 관한 질문으로써 대전지역에서 바람직한 사회적자본의 증진을 위해 중요한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봉사단체(40.0%)가 가장 중요한 모임활동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정당(18.0%), 노동조합(11.9%), 종교활동(7.8%), 동호회(7.2%), 반상회(6.4%), 친목회(5.4%), 학부모 모임(3.0%) 순으로 조사됐다.

→ 표15.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중요 지역네트워크 단위: 명, %

항목	빈도	분포
종교활동	56	7.8
학부모 모임	22	3.0
동호회	52	7.2
노동조합	86	11.9
정당	130	18.0
친목회	39	5.4
봉사단체	289	40.0
반상회	46	6.4
기타	2	0.3
합계	168	100.0



〈표 16〉은 다양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이나 모임에 있어 각각의 모임이 사회적 자본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

→ 표16.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각종 지역네트워크 중요도 단위: 명, %

항목	매우 많이 기여	많이 기여	보통	적게 기여	매우 적게 기여	합계
반사회	30(4.2%)	151(20.9%)	30(4.2%)	150(20.8%)	119(16.5%)	722(100%)
친목회	35(4.8%)	149(20.6%)	35(4.8%)	153(21.2%)	91(12.6%)	722(100%)
학부모 모임	21(2.9%)	140(19.4%)	21(2.9%)	151(20.9%)	114(15.8%)	722(100%)
동호회	26(3.6%)	167(23.1%)	26(3.6%)	151(20.9%)	70(9.7%)	722(100%)
종교단체	66(9.1%)	217(30.1%)	66(9.1%)	94(13.0%)	95(13.2%)	722(100%)
노동조합	37(5.1%)	202(28.0%)	37(5.1%)	87(12.0%)	94(13.0%)	722(100%)
정당	46(6.4%)	211(29.2%)	46(6.4%)	98(13.6%)	117(16.2%)	722(100%)
봉사단체	128(17.7%)	299(41.4%)	128(17.7%)	52(7.2%)	48(6.6%)	722(100%)
선거	94(13.0%)	242(33.5%)	94(13.0%)	79(10.9%)	59(8.2%)	722(100%)
시정참여	94(13.0%)	259(35.9%)	94(13.0%)	56(7.8%)	86(11.9%)	722(100%)

대전지역의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참여방법에 대하여 응답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중요한 참여방법으로 정책결정과정상 공식적 참여(39.1%)와 비공식적 의견제시(35.9%)를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사회단체의 회원가입, 회비납부 외에도 적극적 활동을 포함하는 사회단체의 적극적 참여(13.9%), 사회단체의 회원가입과 회비납부 등을 위주로 하는 소극적 참여(6.2%), 적극적 정당활동(3.5%), 소극적 정당활동(1.5%)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대전지역의 시민들은 지역사회단체 및 기관에 참여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단체의 순수성(46.0%)와 지역사회단체의 영향력(33.0%)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단체의 사회적 지명도(10.7%), 지역사회단체 구성원 및 임원진의 우수성(7.1%), 지역사회단체 참여에 대한 보상(3.3%)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17.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중요 참여방법 단위: 명, %

항목	빈도	분포
정책결정과정 비공식적 의견제시	259	35.9
정책결정과정 공식적 참여	282	39.1
사회단체의 소극적 참여	45	6.2
사회단체의 적극적 참여	100	13.9
소극적 정당활동	11	1.5
적극적 정당활동	25	3.5
합계	722	100.0

→ 표18. 지역사회단체 및 기관 참여시 고려사항 단위: 명, %

항목	빈도	분포
사회단체의 순수성	332	46.0
사회단체의 사회적 지명도	77	10.7
사회단체의 사회적 영향력	238	33.0
사회단체 구성원 및 임원진 우수성	51	7.1
사회단체 참여에 대한 보상	24	3.3
합계	722	100.0

### III. 조사결과와 시사점

시민들의 사회적자본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자본을 위한 대전 시의 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7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시민들은 아직까지 사회적자본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의 순응과 효과적 적용은 정책 대상자들의 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자본 및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사회적자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자본에 대해 인지했던 대전 시민들은 주로 방송(41.1%)과 신문(24.4%)을 통해서 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정책의 홍보를 위해 방송 및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를 사용하여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민들은 대전시의 사회적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 네트워크(27.7%), 시민들의 참여(27.7%), 신뢰(26.3%), 사회적 규범(18.0%) 등의 순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규범의 확립 역시 많은 대전 시민들이 사회적자본의 증진요인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사회적자본의 확충사업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사회적자본의 구성요소 중 신뢰부문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증진시켜야 할 신뢰는 공공기관의 신뢰(5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공공기관의 신뢰의 증진을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신뢰가 지역 사회적자본의 영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 수준의 신뢰 증진에 있어서 이웃과의 신뢰(40.2%)와 가족간의 신뢰(25.1%)가 상당부분을 차지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뢰가 개인적 신뢰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 및 제도에 대한 신뢰에 대하여 대전 시민들은 시청의 신뢰(33.5%)와 시의회(18.7%)의 신뢰가 우선적으로 증진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이것은 시청과 시의회의 신뢰 증진이 지역의 사회적자본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점에서 공공기관 신뢰증진을 위해서 거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신뢰 증진(47.4%)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지방의원, 법원·교육·경찰공무원 및 지방교육청 공무원에 비해 공공기관 신뢰에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기관의 신뢰증진을 위해서는 언론기관(34.5%)과 시민단체(27.7%)의 신뢰가 다른 사회기관 또는 단체(종교단체, 노동조합, 지역기업, 각급 학교)에 비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전달매체의 신뢰는 TV·방송의 신뢰(61.5%)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인터넷매체의 신뢰(22.0%)도 다른 매체(신문·잡지, 전단지, 대면접촉)에 비해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것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사회규범의 향상에 대하여 부정부패근절(39.8%)이 근소하게 시민의식함양(32.1%)과 공공질서 확립(28.1%)에 비해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부정부패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함양과 공공질서 확립의 중요성도 대전시의 사회규범 향상에 있어서 간과될 수 없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공공질서 확립에 있어서 가정교육, 공익적 캠페인, 시민교육, 학교교육 모두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했다.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36.1%)가 뇌물수수(26.9%)와 탈세(23.3%), 교통법규 위반(13.7%)에 비해 시급히 근절해야 할 요인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부패근절을 위해 가장 청렴해야 할 대상으로 정치인(60.0%)와 공무원(23.5%)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응답을 하였다. 이것은 공공부문에 있는 종사자들의 부정부패가 지역 사회적자본의 약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준법의식을 증진시키는데 법집행의 공정성(35.6%)과 투명성(19.7%)이 법집행의 일관성(13.9%), 법집행의 엄격성(10.9%), 법집행기관 공직자의 신뢰(10.2%), 법집행기관의 신뢰(9.7%)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봉사단체(40.0%)를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함으로써 봉사단체의 활동이 바람직한 사회적자본의 증진에 다른 활동(종교활동, 학부모모임, 동호회, 노동조합, 정당, 친목회, 반사회)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사회적 자본의 증진하기 위한 참여방법으로 대전 시민들은 주로 공공기관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식적 참여(39.1%)와 비공식적 참여(35.9%)를 사회단체의 참여와 정당 활동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청회나 자문위원회, 시민 아이디어 제안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대전 시민들은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에 참여를 결정할 때, 지역사회단체의 순수성(46.0%)과 지역 사회단체의 사회적 영향력(33.0%)을 사회단체의 지명도, 사회단체 구성원 및 임원진의 우수성, 사회단체 참여에 대한 보상보다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66 대전발전연구원, 대전복지재단과 업무협약 99



대전발전연구원(원장직무대행 장창수)은 21일 오전 10시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전복지재단과 협약식을 갖고 사회복지정책의 연구·개발 및 관련 정보교류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통해 시민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대전발전연구원과 대전복지재단은 협약서에 기술된 상호협력 내용을 기초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연구 및 학술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 66 ICT·디자인융합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약체결 99



대전발전연구원(원장직무대행 장창수)과 목원대(총장 김원배)는 2월 27일(목) 오전 10시 목원대학교 회의실에서 장창수 대전발전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김원배 목원대 총장, 이용훈 (사)대전디자인기업협회 회장, 홍준강 (사)융합금형발전협의회 이사장 등 대표자와 관계자 20여명 참석한 가운데 MOU 협약을 체결하였다.

금번 협약을 통해 대전발전연구원과 목원대학교는 각 기관의 상호 호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산업 분석, 혁신역량 강화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수행하여 지역 내 ICT융합, 디자인

융합의 지역산업 상생협력 혁신체제 구축 및 조직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기관의 성장을 추진한다. 정부의 경제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핵심 국정목표로 설정되는 이때에 대학이 연구역량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협업과 코디네이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대학, 기업 간의 새로운 상생협력이라는 상징성과 향후 상생협력 협업시스템의 모델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의 MOU협약은 산학협력지원사업의 협력운영,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사업화를 위한 생산시설 구축 및 지원, 산업현장의 디자인 중심 융합 및 교류 협력, ICT 디자인융합의 선진형 지역 금형산업 교류협력, 상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및 워크샵 공동 개최, 연구인력 교류 및 우수인력 추천 및 채용, 산·학간 교류를 위한 협의체 참여 등이다. **▶**

## 66 2014년 기본과제 연구심의회 개최 99

매년 1인 1건씩 수행하고 있는 기본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심의회가 2월 18일, 19일 양일간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연구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방법 및 범위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통해 더 나은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한 이번 연구심의회는 올해 수행되는 총 21건의 기본과제 중 1~2월 시작되는 16건의 과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의위원으로는 대전지역 각 대학의 교수 및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여하였다. 대전발전연구원은 연구심의회를 통해 나온 주요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보고서의 질을 높이고 연구의 활용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 경제 동향

최근 대전지역 경제는 전월대비 고용이 악화되고 건설이 다소 위축되었으나, 생산과 소비활동이 활발하고, 수출과 수입이 증가하였음. 전년동월대비로는 건설이 위축되고 수출이 부진하였으나 생산과 소비활동이 호조세이고 고용상황도 양호한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등으로 전반적으로는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임.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인 하강국면을 보인 이후, 7월부터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고용과 물가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12월 제조업 대부분 업종에서 생산이 확대되면서 광공업 생산이 크게 증가한 모습임. 이처럼 우리 경제의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투자 등 민간부문 회복세가 아직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며, 미국 재정·양적완화 리스크와 이에 따른 신흥국의 불안, 엔화 약세 등 대외 위험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대내외 경제동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 충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내수 활력 제고,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아울러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해야 할 것임.

## 경기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인 하강국면을 보인 이후,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소폭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금융

2014년 1월, 국내금융시장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불안 등에 따른 주요국 중시 금락의 영향을 받아 크게 하락하고, 환율은 외국인 자금유출 등으로 상승하였음.

## 건설

2013년 12월, 토지거래면적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고,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대폭 감소한 반면 건축착공면적은 소폭 증가하였음. 미분양주택도 전월보다 증가하여 건설경기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임.

## 물가

2014년 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농산물과 전기·가스·수도의 비교적 큰 폭의 상승과 기타 공업제품과 서비스 품목에서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하여 전월보다 0.5% 상승하였음.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6% 수준으로 지난달의 0.8%수준보다 더 낮아 매우 안정된 수준임.

## 소비

2013년 12월, 전월대비 연탄소비량을 제외한 관철지표 대부분이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유류소비량을 제외한 에너지부문의 소비가 감소하였으나 대형소매점 판매, 농수산물거래량, 자동차판매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음. 향후 소비동향은 소매판매의 경우, 승용차 판매, 의류와 음·식료 판매 등이 증가하면서 다소 개선될 가능성 있음

## 대외거래

2013년 12월, 전월대비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함. 전년동월 대비로는 수출은 섬유류,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철강 금속제품, 화학공업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수입은 광산물과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은 악화된 모습이고, 수입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음. 무역수지는 2월부터 흑자를 유지한 이후, 12월은 전월보다 흑자폭이 축소되었음.

## 고용

2013년 12월, 전월대비 취업자는 감소세로 반전하고, 실업자는 증가한 가운데 실업률도 0.4%p로 상승함. 전년동월대비로는 취업자가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증가하고 실업자와 실업률도 감소·하락함. 고용상황은 전월 대비로는 2개월째 악화된 모습이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자와 실업률이 감소·하락하여 전반적으로 10개월째 양호한 모습임.

## 생산

2013년 12월, 전월대비 생산과 출하가 증가하고 재고도 증가하여 전월의 위축세에서 다소 회복된 모습이고, 전년동월대비로도 생산과 출하가 증가하고 재고도 증가하여 최근 3개월째 부진한 모습에서 다소 회복 기미를 보임. 향후 생산은 수출 감소 전년도 12월의 생산 확대에 따른 조정 등 일시적인 부정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다소 위축될 가능성 있음.